

##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김 익 한\*

1. 머리말
2. 기록관리 주체의 형성 -  
기록생산기관과 기록관리기관,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3. 기록관리법 체제의 성과와 한계
4.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현주소
5. 제언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기록학 분야의 성장은 어떠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체를 기록생산기관, 기록관리기관, 기록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조망하는 데에 역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저 :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 분석에 기반한 역사 콘텐츠 설계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 한국비블리아학회, 2006 ; 「전자기록의 진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 『기록학 연구』 14, 한국기록학회, 2006 ; 「불균형 간존 행정기록의 평가방법 시론-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절차론 수립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13, 한국기록학회, 2006 외 다수

을 두었다. 그 결과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이 아직도 불균형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과 전문가 집단의 일부 선도적 인물들에 의해 기록관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형적인 엘리트 모델에 의한 성장 시기로, 결과적으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의 기형적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추동한 힘은 기록관리기관과 기록 전문가 집단의 성장이 보다 보편화 되어 엘리트 모델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서 찾아진다. 특히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가 집단이 양질적으로 성장하여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는 패턴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천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는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의 발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적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각 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을 서둘러 설치하고 기록연구사를 조기에 배치하여 기록생산기관의 미발달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기록관리 주체, 설명책임성, 지식활용성, 기록전문가, 기록관리기관, 기록관리법, 기록관리 혁신, 대학원 기록관리 교육, 전문가 협회, 기록관리혁신로드맵

## 1. 머리말

2005년 여름 처음으로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고 중앙행정기관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었다. 그들은 1999년 국립목포대학을 필두로 하여 개설된 대학원 기록학 과정들을 이수하고 기록학 혹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들이었다. 10년 앞을 내다보면 기록 전문가들이 행정기관에 배치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무경험, 현장 취약성 등을 들어 기록연구사의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은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이는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들의 ‘기록관리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2006년 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된 기록연구사들의 생생한 현실 증언은 기록연구사들이 단지 전문가를 넘어 혁신의 전도사로서 역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sup>1)</sup> 필자는 이런 현상이야말로 기록관리계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10년 후 그들은 우리 사회의 기록관리를 리드할 것이며 그들에 의해 우리의 기록관리는 정상화를 넘어 지속 발전의 전망을 갖게 될 것임 틀림없다. 그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은 한결같이 기록관리 혁신을 지향하고 있었다. 혁신을 하려 하는데 이것저것 아직 미진한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 천지였다. 또

---

1) 김계수, 「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 T/F 회의, 2006년 11월 24일 ; 마원준, 「기록관리 현황 및 혁신방안-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 T/F 회의, 2006년 11월 24일

한 그러한 불만어린 발언의 배경에는 그들의 기록관리 정상화를 염원하는 진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10년 전 몇 안되는 연구자들의 작은 외침으로만 들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기록관리의 현장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이러한 현상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 1999년 기록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지금에 이르는 변화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회고해보면 정말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마치 성장을 위해 모든 가치를 뒤로 하였던 개발독재 시기의 역사와도 같이 기록관리의 역사 역시 그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되돌아봄이 미래를 깊어지고 갈 기록연구사들의 목소리를 보다 값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변화 발전은 1999년 기록관리법과 국민의 정부의 “기록관리개혁”, 2004년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과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으로 대표된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속도의 변화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 현상을 지탱한 각 부문들의 실상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러한 실상에 비추어 표면적 현상의 실체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록연구사들의 불만어린 목소리는 표면적 현상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실체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 부문의 부족분을 하나씩 메워가고 길게 보며 일을 진행해 가는 하나의 출발지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구성하려 한다.

## 2. 기록관리 주체의 형성 - 기록생산기관과 기록관리기관,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기록관리의 목적이 설명책임성과 지식 유통의 달성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ISO 15489의 기록관리에 대한 언급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sup>2)</sup> 이 글과 관련해서도 설명 책임성과 지식 유통의 달성이라는 기록관리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우리는 기록관리를 그 당위성과 1차적 주체인 기록관리 전문가의 입장에서만 논해온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관리의 두 목적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는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주체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보다 전체적인 상황 인식에 도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먼저 기록을 통해 공공업무 그 자체를 설명 받을 주체는 넓게는 국민 일반, 혹은 시민사회에서, 좁게는 업무평가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시민사회 전체가 설명 책임성을 실현하는 기록의 존재가치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그 사회의 기록관리는 정상화될 수 있다. 또한 공공업무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평가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공공업무와 기록의 관계구조를 파악하고 기록을 통해 기관과 조직 및 개별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ISO 15489에서 이 표준을 사용할 주체로 업무담당자나 경영자를 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

2) ISO 15489 정보와 도큐멘테이션 :기록관리 Part 1 일반사항 중 3.16 기록관리, 4. 기록관리의 이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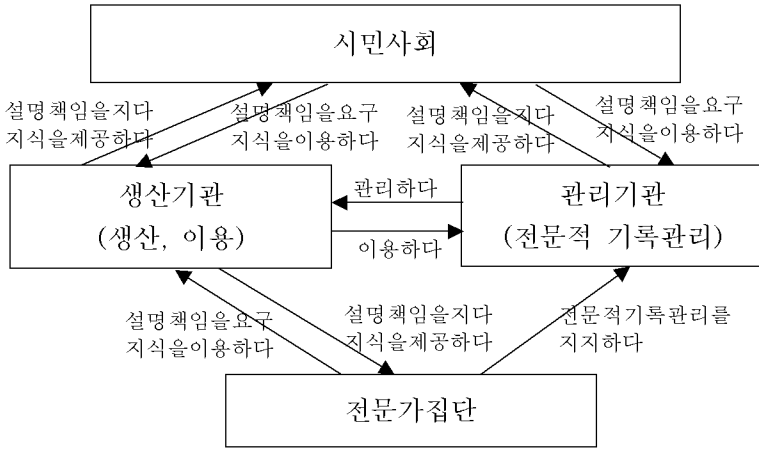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sup>3)</sup>

또한 지식의 광범한 유통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많은 주체들이 상정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보면 개념적으로는 공공기록에 접근 가능한 모든 이들이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기록생산자들이다. 공공기록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사회 모두가 기록관리에 의해 지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될 핵심 주체들이다. 이들은 기록의 이용자임과 동시에 업무과정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기록의 생산 과정에서 일정부분 기록관리에 개입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또한 계선 조직을 통해, 또는 동료 공무원으로서 기록관리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주체들이기도 하다. 물론 더욱 광범위하게는 연구자, 교사, 학생, 언론, 일반인 등등 기록에 의한 지식의 유통에는 다수의 주체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설명책임성과 지식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극명하게 표출된다. 기록관리가 단지 사무처리의 수준을 넘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설명책임성과 지식 유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과정에 대한 분석에 토대를 둔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하고, 또한 지식 유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이를 전자적 형태로 수행하려면 그 관리 원리와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연유로 각국의 기록관리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선도되고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은 기록관리의 방법론을 연구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을 양성하고 또한 기록관리기관에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

3) ISO 15489 정보와 도큐멘테이션 :기록관리 Part 1 일반사항 중 1.범위.



[그림] 기록관리 주체들의 상호관계

대학원, 학회, 전문가협회 등이 각국에 존재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기록관리를 둘러싼 주체들은 기록생산기관, 시민사회, 기록관리기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며 이들 모두의 협력에 의해 기록관리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의 각 주체들의 역할이 균형적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기록관리는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균형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발전의 선후행에 따라 아직 발전하지 못한 요소들을 서로 이끌어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가게 된다. 기록생산기관이 기록을 생산하기만 하고 기록을 통한 설명책임의 중요성이나 지식 활용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여 기록관리 정상화에 동참하지 못할 때는 정상적으로 기록관리가 발전할 수 없다. 기록관리기관이 전문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였을 때 역시 정상적으로 기록관리가 발전

해 갈 수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이 준비되어 있지 못할 때에도 정부 주도형으로 기록관리가 기형적으로 진전되거나 발전의 한계에 봉착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주체들은 각기 상이한 수준에서 기록관리에 대응해 왔다. 특히 기록생산기관의 인식과 대응의 한계 속에서 일부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선도적 역할에 의해 기록관리가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엘리트 모델의 허와 실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sup>4)</sup>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일부 역량과 전문가 집단의 헌신적 활동에 의해 해외의 기록관리 선진 체제가 급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도입되었고, 엘리트 모델의 장점을 살려 법제화 등의 강제적 수단을 통해 기록관리의 발전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일종의 후발성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몇 년간에 걸쳐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던 기록관리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한계 역시 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록생산기관 전반의 미발달로 인하여 법 제도 및 방법론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의 집행에 많은 한계가 발생하였고, 급속한 시스템 보급 등에 의해 예상하지 못하였던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일부에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강제력 밖에 있는 일반 사회조직이나 기업 영역에서의 기록관리는 아직 후진적 상황에 처해 있는 기형성조차 나타나게 되었다.

개발독재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와 지속적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듯이 기록관리도 이제 각 시기의 현상과 오늘

---

4) 김익한, 「전문요원제도와 기록관리교육의 질적제고」, 『기록학연구』 7, 한국 기록학회, 2003, pp.129-132.



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엘리트 모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주체의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발전 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때이다.

### 3. 기록관리법 체제의 성과와 한계

2000년은 기록관리법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 기록관리사에 한 획을 긋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총무에서 수행되는 문서수발 차원의 기록관리가 이 법에 의해 과학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법은 먼저 회의록, 연구보고검토서 등 기록의 생산을 일정부분 강제함으로써 공공 업무는 존재하나 그것이 기록으로 생산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였다. 동 법은 공공 업무 수행의 과정과 결과로 만들어지는 기록 모두를 등록하게 하여 미등록과 무단 폐기의 악습을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확립하였다. 이 등록제도는 등록된 기록 목록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등록된 기록 목록은 전산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이를 통해 기록의 종합적인 가치평가,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처리, 분류 및 기술 등의 영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록관리기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공공기록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전문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전문기관,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기록관리라는 기

록관리의 기본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sup>5)</sup>

이 시기에 기록관리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당시 정부기록보존소 내부로부터의 개혁의 움직임이 동력이 되었다. 특히 당시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김선영의 노력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우리 정부의 기록관리를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기록관리 개혁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하나씩 실천해 가기 시작하였다.<sup>6)</sup> 여기에 정부기록보존소 내부의 일부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록관리법의 제정에 이르는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관리법의 시행을 계기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기록관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갔다. 수집체계의 확립, 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보급, 표준화 정책의 수립과 시행, 전문요원의 확보 등의 노력은 기록관리법과 함께 공공영역에서의 기록관리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할 수 있다.

또 한편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움직임 역시 기록관리법 체제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1995년 정보공개사업단을 설립하고 기록관리에 의한 설명책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운동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요구와 실질적인 공개청구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

---

5) 기록관리법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김재순, 「기록물관리법 시행현황과 정책방향」, 『기록보존』 13, 국가기록원, 2000 ; 김선영, 「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기록보존제도의 확립」, 『기록보존』 12, 국가기록원, 1999 참조.

6) 김선영, 「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기록보존제도의 확립」, 『기록보존』 12, 국가기록원, 1999 pp.11-12

고 이는 공공기록이 설명책임성 실현의 기본 기재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국적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진행된 관공비 공개운동은 기록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최초의 실천운동이 되었다.

이 시기의 시민단체의 움직임 중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은 1998년 참여연대에서 준비되었던 대통령기록법이다. 공공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 제안은 아니지만, 기록에 의한 설명책임성의 실현이 투명한 국가운영에 기반이 되며, 특히 대통령기록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천명한 일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기록관리법 제정과 맞물려 시민입법으로 대통령기록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국가기록관리 체제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은 기록관리기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역시 기록관리의 문제를 환기시키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문헌정보학계는 개별 연구자의 차원에서이기는 하지만 국가기록관리체제나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성 등에 대한 문제 환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복희 교수 등의 초기 논문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sup>7)</sup> 1996년 한국역사연구회 주최로 개최된 심포지엄 “세계의 기록관리제도”는 학계의 그간의 노력의 결실 중의 하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기록관리 선진국의 기록관리 체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비해 아직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

7) 한복희, 「문서관리학과 도서관학 : 도서관학과 교과목으로서의 문서관리학」, 『충남대인문과학논문집』 8-2, 1981.

있었던 한국에 기록관리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였다.<sup>8)</sup>

학계의 노력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 학술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학술단체들은 학문형성의 초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발간, 심포지엄과 월례학술발표회 등 학술행사의 정기적 개최, 시민강좌의 기획 및 개최, 전문 강의의 개설 등 매우 활동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문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성이 국가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학계가 앞장서야 할 중요한 몫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목포대에서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기록관리학과가 설립된 이후 10여개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전문가 양성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기록관리의 이론과 방법론 개발, 이에 토대를 둔 전문가 양성은 기록학의 불모지였던 우리 사회를 일신시킨 커다란 변화의 하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학계의 움직임에는 한계도 존재하였다. 관공비 공개운동이 대중적 확산력을 지니고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국민 일반이 기록의 설명책임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제도개혁운동을 통해 공개를 위한 환경이 상당수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국민 일반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록 운동 역시 충분한 조직력과 실천력,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의해 견인되었던 것이라는 점

---

8) 김유경 외, 「특집:역사기록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비평』 38, 역사문제연구소, 1997.

에서 엘리트 모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의 움직임 역시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였다. 역사학계, 문헌정보학계, 교육학계의 참여로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활성화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학계 일부의 선도적 노력에 의한 것일 뿐, 기록학 영역의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안정화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우선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일부 연구자가 선도적으로 기록학 본령의 이론과 방법론 등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제도사나 외국 사례 소개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이는 국가기록관리의 정상화라는 대의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이미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전공 이동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록학 영역의 전문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말해준다. 또 한편으로는 기록학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지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국내외에서 기록학을 전공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한 새로운 전문연구자 그룹에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는 그대로 전문가 양성의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기본적으로는 신생 응용학문을 수용하는 데에 보수적인 대학사회의 경향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협동과정이나 특수대학원에서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전담 교원의 충원 등과 같은 본격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였고, 전담 교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가 양성이 이뤄짐으로써 교육상의 한계 역시 노정되었던 것이 바로 기록관리법 체제 전반기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9) 관련된 자료로 『기록학연구』 1, 한국기록학회, 2000 참조.

결국 2000년을 전후한 기록관리법 체제 형성기의 기록관리는 기록관리기관의 일부 선도적 인물들, 시민단체나 학계 일부 선도적 인물들에 의해 지지되며 제한적인 발전의 양상을 띠고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국민적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했으며,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전문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했고,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의 제도적 개혁은 있었으나 이 역시 집행의 측면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기록관리의 주체의 면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국민 일반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의 한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기록생산기관 일반의 무관심, 기록관리기관의 내부 혁신의 낮은 수준, 학계나 전문가 그룹의 제한적 발달로 인하여, 엘리트 모델에 의해 발전은 진행되었으나 총체적으로는 기반과 혁신 확산의 측면에서 아주 위약한 상황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4.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현주소

참여정부가 들어선 초기에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혁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법 체제 그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변화를 예고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움직임이 존재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변화이다. 참여정부 등장을 전후해서 대학원 교육이 점차 그 성과를 맺기 시작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필두로 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개별

연구 성과의 연구사적 의미 이전에 매년 20여편씩 발표되기 시작한 이들의 논문은 교수들을 비롯한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선도되었던 연구의 상황이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음을 알리기에 충분하였다. 대학원 교육에 지지되면서 전문가 그룹이 확대되기 시작함으로써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연구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선도적 연구자들에 의해 기록관리법 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부기록보존소의 소수 선도 그룹에 의해 기록관리법이 만들어졌을 시점에는 전문가들이 기록관리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 제언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다. 학계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체제나 과학적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수준의 역할 이상은 주체적 역량 상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확대 발전으로 인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록관리의 구체 영역에 대한 제안과 참여가 점차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는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참여정부 초기에 기록관리체제의 혁신 방안에 대해 공식 제안을 한 것이 변화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식 제안서에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국가기록관리의 전반적 혁신을 요구하고, 독립성, 전문성,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3부 독립위원회의 형태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개편할 것,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 설치를 서두를 것, 정보공개제도의 개편을 통해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개 활성화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참여의 기반을 조성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는 전문가 집단의 확대와 연구 수준의 성장에 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

시민단체의 활동 역시 정보공개 운동을 중심으로 하였던 지난날에 비해 한 차원 발전하였다. 참여연대가 기록관리 제도 혁신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록관리 제도 혁신 운동은 기록관리법의 제도 상 한계를 분석하여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 설립 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요구하는 운동, 회의록 등 기록 생산의 실상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4년 세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기획하여 연재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시민단체의 운동의 범위와 질이 성장하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sup>10)</sup> 위에 소개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공식 제안서와 ‘기록이 없는 나라’는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기록관리혁신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성장 발전은 학문적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사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아직 기록학의 기본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회와 학회지 등이 만들어지면서 연구 활성화의 조건이 성숙되어가는 도정에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외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소개하거나 평가, 정리기술 영역, 혹은 기록관리 실무 영역의 기본 수준의 논문들이 발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전문가 집단의 활동은 그 양·질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대학원 교육의 성과로 전문가 집단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젊은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에 촉발되면서 연구 전반이 활성화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10) ‘기록이 없는 나라’, 세계일보, 2004년 5월 30일~7월 14일 특집기사.



우선 연구 영역의 확대되었고 개별 논문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sup>11)</sup> 특히 기록학 일반의 차원에서는, 기록화 전략론이나 기능평가론이 소개됨과 동시에 이를 이론의 측면에서 재구성하는 연구, 평가론의 실무 적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호주의 시리즈시스템이나 업무기능분류론에 입론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거나 현실에 적용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는 성과가 있었다. 기록 기술론의 영역에서도 기술규칙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 사진 등의 특수기록의 기술요소를 개발하는 연구, 전자기술과 일반 기록기술과의 연관구조에 대한 분석 등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기술규칙을 소개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버렸다. 각국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정리하고 이를 기록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화한 연구들 역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기록학 이론 영역에서의 변화에 착목한 연구들도 착착 진행되어 기록연속체론이 재해석되기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식관리와의 연관구조,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 등에 대한 수준 있는 이론 논문들도 발표되었다.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인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전자기록관리의 기본 특성과 전체 구조를 다룬 논문에서부터 진본성 유지 방안에 대한 연구, 장기보존객체 모형과 이의 적용을 다룬 연구, 품질평가에 관한 분석,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전자기록관리의 과정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구조에 관한 연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요건에 대한 분석, 전자기록의 분류 문제와 전자기록질의 구조와 구성에 관련된 연구 등 현실적 필요에 대응할 만한 수준의 연구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수 발표되는 성과를

11)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각 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각호 참조.

이루어졌다. 이는 종이기록 관리체제를 전자기록관리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키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타 서비스 영역에 관련된 연구들, 기록사료의 관리와 서비스 객체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 종교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공공영역 이외의 분야에서 적용할 기록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 역시 발표되면서 전문가 집단의 폭과 질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공공영역 내에서도 의회기록, 도시철도기록 등과 같이 생산기록의 특질과 방법상의 특성을 지니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점차 구체적이고도 분석적인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양·질적 성장의 결과, 그 활동의 폭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공문서의 기록학적 분석’과 같은 대형 연구프로젝트가 집체적 연구를 통해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성과가 타 학문분야에 모범적 사례로 소개될 만큼 연구의 질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sup>12)</sup> 기록학이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연구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이를 통해 아주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이 집체적 연구 방식 아래 양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경기도의 기록관리기관 설립 운영 및 자료관 시스템 확장에 관한 연구, 부천시 기록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 설계, 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방안 연구,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체제 구축, 기록관리 표준연구, 과학기술부 단위업무와 단위과제 매핑,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업무기능 설계 등등 전문가 집단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록관리영역의 실무적 발전은 물론 학문 영역의 질적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sup>13)</sup>

---

12) 배성준, 『조선총독부 조직구조와 분류체계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 설문원 외,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 방법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전문가 집단의 성장은 기타 교육영역, 출판 영역, 컨설팅 영역 등에서 나타났다. 연구 수준이 제고됨과 동시에 실무적이고도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이를 토대로 한 기록관리 전문교육이라는 새로운 장도 열리게 되었다.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학 전문교육, BRM과 기록분류체계에 대한 전문교육 등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기업의 기록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기록관리 전문교육도 시행되었다.<sup>14)</sup> 또한 시민단체의 기록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NGO기록관리 특강 등의 새로운 아이템의 교육 역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을 주체로 하여 개발되고 있다.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의 전문잡지 이외에, 단행본 출판물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함과 동시에 ICA 교육교재가 완역되었으며, SAA의 기초시리즈 역시 출판되는 성과를 이루었다.<sup>15)</sup> 최근에는 이슈 페이퍼의 형태로 기록관리 ROI 등과 같은 새로운 주제의 출판물들 역시 활발하게 기획 집필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6)</sup> 또한 메리츠화재, 교보생명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프로젝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친일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관리 전략 설계 컨설팅도 활성화되고 있는

- 
- 13) 경기도, 「경기도기록보존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4 ; 김익한 외, 「부천시 자료관 설립 및 통합 기록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2003.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기록관리 재설계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사업」, 2006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과학기술부 기록의 분류 및 관리기준 설정을 통한 기록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2006
- 14) 한국 국가기록연구원, ‘제1회 기록관리 전문가를 위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2005년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업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 2005년.
- 15)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감수,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 번역 총서 1~24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기록학기초시리즈 1~5
- 16) 임진희, 이미영, 『기록관리시스템의 투자대비효과(ROI) 분석방법』,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6.

추세이다.<sup>17)</sup>

전문가 집단의 성장은 연구, 기타 실천 활동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었고, 동시에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전반적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여기에다 기록관리 정책의 수립, 집행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의 변화발전 역시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혁신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종래와는 달리 국가기록원장을 비롯하여 핵심 부서에 기록관리 혁신에 적극적인 전문가들이 배치되면서 기관 내부에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동력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의 변화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우선 국정기록비서관에서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조직 명칭이 변화한 것이 그 내부적인 변화의 양상을 대변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의 차원에서 이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야말로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록관리라는 전문 영역에서 풀어가려 하였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의 결과로 2004년 말 대통령비서실에 업무 및 기록관리혁신 T/F가 만들어졌고, 같은 시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가기록원 역시 이에 발맞추어 기록관리혁신단을 조직함으로써 법제와 프로세스, 시스템을 포함한 표준의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2005년에 확정된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은 이상의 변화와 노력을 총합한 성과였다. 로드

---

17) (주)한국문헌정보기술, 「메리츠화재 사료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약사집 발간」, 2005 ; (주)한국문헌정보기술, 「사료정리 및 사료관리 시스템 개발」, 2002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료 콘텐츠 구축을 위한 모형 및 절차 개발 연구」, 2007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방향과 전략」, 2005 ; 이정우 외, 「수집사료 분류·정리 체계 연구」, 2006 ; 김성혁 외, 「전자사료관 시스템 설계 방안 연구」, 2006.

맵의 확정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정부 전체에 확산시킬 기록관리 혁신종합계획이 마련되어 대대적으로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8)</sup>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국가기록원 양 기관에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다수의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양 기관의 능력의 향상은 학계의 발전을 능가할 만큼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장을 이끌어 낸 주체는 기존에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던 인력들과 전문가로서 새로 투입된 인력들 모두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내외부의 변화 동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스스로 발전된 모습을 체현한 경우이고, 후자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가로 성장한 경우이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국가기록관리 혁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부처에 새로이 배치된 기록연구사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록관리 영역의 전반적인 발전이 기록관리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정상화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은 아직 충분히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달해있지는 못하지만, 기록관리가 일부 전문가나 일부 중앙기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기관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는 데는 충분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기록관리법 체계가 성립된 시점의 엘리트 모델에 의한 기록관리와 지금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주체의 급속한 성장이 기반이 되면서 엘리트 모델의 상당부분

---

1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2006.  
(<http://www.innovation.go.kr/index.htm>)

을 극복해 낼 수 있었고, 또한 각 주체의 협력에 의한 성장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성장의 내용 역시 충실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기록관리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 속에 위치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물론 한계가 없을 수 없다. 그 한계 역시 주체의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기록관리기관 모두의 수준에서 주체 역량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록의 생산자이자 이용자인 기록생산기관은 기록관리의 의미와 구체적인 혁신 방법에 대해 인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혁신로드맵과 개정기록관리법을 교육하는 등 기록생산기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왔지만 아직 그 성과를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판단이다.<sup>19)</sup>

기록관 설립이 이제 개정 기록관리법이 시행되는 2007년 4월을 기점으로 활발히 이뤄지겠지만 기록생산기관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리 낙관할 만한 일이 아니다. 기록관 등 각급 기록관리기관이 독립적 지위에서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갖고 출범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동한 2~3년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록연구사의 조기 배치를 비롯한 조치가 서둘러 취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록 서비스의 본격화를 통해 과학적 기록관리의 결과가 이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임을 실감하도록 노력한 것 역시 필수적이다. 현재의 기록관리 혁신이 관리의 차원에서의 혁신이라면 서비스를 중심에 둔

---

1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 2006.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 영역 역시 기록관리법 체제 성립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몇 가지 의미 있는 프로젝트와 교육활동을 통해 기업 기록관리 등의 영역에서 변화의 단초가 발견되기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전사회적 차원의 변화로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대중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특히 기록관리와 관련된 대학원생 중심의 각종 블로그 활동들, 카페 형태의 논의 구조의 성장 등이 시민사회 영역 전반의 성장에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일은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확정된 이후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다수의 연구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집행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자문회의 등의 형식으로 양 주체의 협력 체계가 운영되던 수준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그것도 프로젝트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협력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sup>20)</sup> 이는 실무와 연구의 양 영역이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좋은 선례라고 판단된다. 학계의 발전을 실무 영역이 보장하고, 실무영역의 발전을 학계가 지지하는 바람직한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

20) 국가기록원 발주, 명지대학교 기록과학 대학원,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방안」, 2006 ; 국가기록원 발주, 「지방기록관리혁신 연구」, 2006.

## 5. 제언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은 그 자체로서 완성될 수는 없다. 국민의 정부 때 만들어진 기록관리법 체계가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정이었듯이,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 역시 하나의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록관리와 관련된 각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기록생산기관, 사회 일반, 국민 일반은 기록의 설명책임성과 지식 활용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 역시 성장의 도정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연구사들의 목소리는 그간의 변화를 적절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를 비롯한 기록관리기관들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을 통해 그 전문성과 혁신성의 측면에서 커다란 자기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록관리 주체의 균형 성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제한된 의미밖에 지나지 못한다. 특히 기록생산기관과의 불균등 성장으로 인해, 기록연구사들 각급기관 기록관리의 혁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로 인해 기록연구사들의 불만어린 발언들이 강하게 표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의 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을 통해 단순한 엘리트 모델은 조금씩 해소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트 모델에서 대중화로의 변화를 추동한 힘은 대학원 교육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



기록연구사의 양성뿐만 아니라 기록학계의 전반적인 성장도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에 힘입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기록관리혁신로드맵에서 정의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정책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기록학 대학원 인증제는 이러한 의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의 시행으로 각 대학원에 보다 많은 전임교원이 확보되고, 이들을 통해 연구가 더욱 진전되며, 진전된 연구의 결과가 양질의 교육을 낳고, 그 결과 보다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가 집단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록관리 현장을 책임질 기록연구사의 조기 배치와 이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보다 발전된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요건일 것이다. 기록생산기관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현실 상황에서 기록연구사의 존재는 이들을 혁신 동력으로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록연구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 실무 집행능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함에 틀림 없다. 또한 공동 연구, 공동 실무 작업, 연구 행사 등의 공동 기획, 기관 별 프로젝트의 수행 등을 통한 학계와의 긴밀한 연계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 ABSTRACT

# The Introduction of archival science and the renovation of records Management(since 1999)

Kim, Ik-Ha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hort history from 1999 to the present time, how the Korean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world had grown up, and what the development of the branch of records and archives studies resulted in.

First of all, it is looked out upon the transition and feature of each initiative bodies of records management, containing the records producing body,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body, records and archives professional body, and civil society. As a result, this article points out the disequilibrium state of the records producing body and civil society, for all the growth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records and archives professionals.

During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law, the Korea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ad been made a rapid progress by some part of the leading group being to Korean Records and Archives Service and the society of professionals. But it is estimated only the malformed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model of elites, although we could achiev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Records and Archives Act.

The condi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was distinguish from the state of former times, being driven up

the renova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e main power of the renovation was sought out by overcome of the elite model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val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extending wide range. Particularly professionals to accept the education of graduate school grew up in quantity and quality and then they let the pattern of the collaboration with archival institutions take root in Korea. As The Road Map on the Renovation of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was made, the government put into practice, so the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Korea could take a step of steady and continuous growth.

But the development of the records produc.ing bodies and civil society is staying at the low level as yet.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have the most important means that the professional instruction become to normalize and archivists who posted in public agencies after graduating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discharge their duties. And each public agencies have to speed up to set up the institutions for records management including some archivists so that overcome the condition of underdevelopment as fast as possible.

**key words:** the initiative bodies of records management, accountability, the usability of knowledge, records and archives professionals, records and archives institution, The Korean Records and Archives Act, the renovation of records management, the educa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the graduate school, the society of records and archives professionals, The Road Map on the Renovation of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